



도의회 광장

2021
10
제78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239 | www.council.jeju.kr ISSN 2671-9754

02

제399회 임시회 개회사



03/07

주요 이슈



08

생생 의정활동



10/11

함께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밤하늘 별빛 따라 빛나는 별처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의 방두포 등대가 불을 밝혔다. 밤하늘의 은하수와 밝기를 겨룬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겪은 고통의 무게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인내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 밝은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기다리던 일상이 반짝이기를 / 성산읍 섭지코지에서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저조, 경기회복, 경영혁신 앞장서야”

제399회 임시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12일 제399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다음달 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발표되는 출자출연기관 기관별 경영평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써야 할 올해 예산의 집행도 저조해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기관도 4개소나 되며, 집행률이 18.5%인 기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지원하고 경기회복과 경영혁신

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주어진 예산마저 적기에 제대로 쓰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 비대화를 위한 예산만 매년 증액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사업추진의 과오를 의회가 철저히 검증해 앞으로 제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출자출연기관장의 해임을 촉구라도 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위원회별 안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현안보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회사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경기 부양해야”

제399회 임시회 개회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0월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 예산이 곧 7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지방채를 적극 활용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먼저 “도의회 자체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이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세 증가에 힘입어 올해 5조8천억 원에서 약 8천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늘긴 하지만 국비 매칭을 제외해버리면 가용재원 증가분은 얼마 되지 않아 계획된 지방채 발행 없이는 재정투입 여력이 별로 없다.”며, “지방채를 적극 활용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민생경제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양 행정시의 경우 증가된 도 예산에 비해 행정시 실령액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들과 직접접촉에 있는 행정시 예산이야말로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두 차례나 유찰 된 제주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좌남수 의장은 “유찰 사유인 사업타당성 문제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지금의 사태는 명백한 행정의 판단 오류”라며, “도민들이 처하게 될 심각성에 대해 행정만 무감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수처리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지만, 도민부담과 불편만 가중시키며 도민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5분 발언

“탄소 없는 섬, 단순 구호에 그쳐선 안돼”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사진·화북동·더불어민주당)이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10월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가 만들어야 할 탄소중립 사회 구현이 단순한 구호여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 “제주는 이미 2012년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CFI2030)’을 선언해 모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재생에너

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서도, “그러나 성과를 보면 탄소없는 섬을 구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경우 핵심 시설인 풍력발전기의 고장과 운영 중단을 반복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이 20%대로 떨어지다 결국 10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고 기후변화대응 추진본부의 경우 운영 규정은 만들어졌지만 운영성과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 탄소중립 예산제도 도입, 기후변화대응 추진본부 체계 재정립 등을 주문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대착오적, 폐기해야”

송창권 의원



송창권 의원(사진·외도·이호·도두동·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대해

도민 정서와 어긋난 제도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10월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주는 것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나 공여지책으로 당분간 활용하는 미봉책이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

은 제주의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는 구태한 정책”이라며, “특히 환경적 가치가 곧 제주의 미래 가치와 비례하는 오늘날에는 도민의 정서와도 배치하는 착오적 제도로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 의원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엄격해 활성화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오판은 말아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실적을 올리려 오히려 제도를 완화하거나 규제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투자 실적에 갈수록 줄어들자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도의회 제주형뉴딜2.0 종합계획

청정과 공존 향한 변화와 혁신...「제주형 뉴딜 2.0」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2일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1주년을 맞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

획」을 발표했다.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은 정부가 지난 7월 14일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에 대응하면서 제주만의 차별화된 도약을 위해 수립됐다. 이는 약 2달여 간 전 실·국, 행정시 별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과제를 보완하면서 내부토론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제주형 뉴딜 TF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 「제주형 뉴딜 1.0」에서 제시했던 추진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국비확보 및 사업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별

과 집중」원칙에 따라 과제가 선별·보완됐다.

이날 발표는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모두 말씀 후, 제주형 뉴딜 TF 공동단장인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의 1주년 성과 보고에 이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의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 설명 순으로 이어졌다.

「제주형 뉴딜 2.0」은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휴먼 뉴딜’ 3대 축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 뉴딜’이 뒷받침하는 3+1체계 추진구조로 확대 개편해 한국판 뉴딜에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형 뉴딜 2.0」과제는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기존 166개에서 145개가 늘어난 총 311개로 추진된다.

특히,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해 청년인재 양성, 취약계층 보호, 코로나19로 가중된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6조 4,469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4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제주형 뉴딜 2.0」과제는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기존 166개에서 145개가 늘어난 총 311개로 추진된다.

특히,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해 청년인재 양성, 취약계층 보호, 코로나19로 가중된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6조 4,469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4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4·3특별위원회

“공감 이끄는 4·3 지원 활동·제도 개선 노력”

4·3특별위원회는 4·3의 아픔이 서려 있는 북촌마을 4·3기념관, 애기무덤 및 북촌마을 4·3길을 현장방문 했다.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0월 6일 제5차 4·3유적지 현장 답사를 위해 조천 북촌마을 4·3길을 방문했다.

4·3특위 위원들은 너븐송이 4·3기념관을 출발하여 애기무덤에서 추념한 후, 마을 서쪽의 서우봉 학살터(문주기암), 환해장성, 가릿당, 북촌포구, 낸시 빌레, 평동산을 거쳐 북촌 대학살의 현장인 당팓과 북촌초등학교를 둘러봤다.

4·3특위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읍)은 “북촌은 봄이면 푸른 바다와 노란 유채꽃이 절경을 이뤄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표적 관광지가 되었

지만, 4·3 당시에는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인명희생이 따랐던 참사의 현장이었다.”면서, “제주에는 이처럼 참담한 역사와 진실이 묻혀 있는 4·3유적이 산재해 있어 그만큼 남은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숨겨졌던 역사가 1978년 현기영 선생님의 소설 ‘순이삼촌’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4·3길 조성사업과 다크투어, 역사탐방 등을 통해 대중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올해 현장방문은 북촌마을을 끝으로 일단락되지만, 문화·예술 활동, 기념사업 등 대중의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지원 활



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4·3유적지가 잘 조성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

“코로나19로 정보약자 소외 가능성 높아 배려 필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정보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9월 28일 제1소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다’를 주제로 제1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현주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사회의 과학기술적 발전은 효율적이다.”면서도, “정보격차가 큰 약자들에게는 접근성에서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은 인간을 무차별적으로 대우하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하고 있고, 노인계층의 경우 디지털 정보 격차로 안전 자산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집에서만 지내게 되는 등 코로나로 인한 활동제한, 우울증, 교육격차 및 가족 부담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강성민 특위 위원장은 “제주도와 도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비대면 소비 플랫폼 관련 ‘지역 배달앱 구축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도입은 요원한 실정이다.”며,

“디지털 정보 접근에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해소 방안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화해와 상생 4·3 정신, 남북 화해에도 적용”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9월 29일 대회의실에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증진을 위한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

장이 제주를 찾아 “4·3 해결 과정에서 자리잡은 ‘화해와 상생’ 정신을 ‘남북 화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이사장은 특강 연사로 나서 “저는 4·3의 화해와 남북간 화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3 화해의 역사가 그랬듯이

남북간에도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실한 사과와 더불어 화해와 협력, 포용, 공생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제주도 대표 상품인 감귤이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 된 이유도 ‘화해의 정신’이 깃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에서 제주 감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해 2010년 5.24 조치 이전까지 12년간 이어온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의 첫 번째 사업이자 최장기로 지속된 대표사업이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지원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지원을 모으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도의회 남북교류특위와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각종 남북교류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교류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숙 의원)는 9월 28일 도내의 남북교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을 구성 운영하고,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자문위원은 향후 새로운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해 제주형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미래 정책 아젠다 발굴을 비롯해 특위 활동과 운영을 위한 자문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강경훈 대한태권도협회 국제심판,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원장, 김남훈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공동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복지사 킨텍스 대표 이사, 홍재형 통일부 남북대화 자문위원 등 총 5명

이다.

강민숙 위원장은 “제주가 비타민C 외교라 불릴 정도로 전국 지자체 중 남북교류사업에 선도적이었던 만큼 앞으로 새로운 미래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준비해 실현가능한 교류사업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외부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다. 보다 더 내실있게 특위를 운영하고 뜻깊은 활동 성과



도 낼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숙 의원, '풀뿌리 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연구소가 주관하는 2021년 풀뿌리 의정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지방자치발전연구소는 2014년 전·현직 지방 의원들의 협동조합으로 출범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의회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풀뿌리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기념해 지난 3년 동안 펼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다.

강민숙 의원은 원도심에 거주하며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의정활동 목표를 '마을공동체 회복 및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으로 설정하고,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탐방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제주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민숙 의원은 "원도심에 거주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지난 3년간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독심을 가지고 요망지게 요구하고 설득하고 토론하면 상대방이 움직이고, 또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노하우를 토대로 계속해서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출범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희현·오영희 의원, 제3회 제주산림환경대상 수상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0월 15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열린 '제3회 제주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입법부문과 자치부문에서 수상했다.

입법부문을 수상한 김희현 의원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제11대 도의회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문화관광, 농수축, 행정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례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했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이어 후반기에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분야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치부문을 수상한 오영희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

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의정활동 노력을 인정받았다.



“도의회에 자치조직권·예산편성권 쥐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도의회에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제주특별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중앙·정방·천지동)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는 공동으로 10월 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전문가와 제주도의회의 의원 등이 참가하여,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박노수 교수는

“정부의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과 지방자치 추세를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시 제주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 3법(지방의회법, 지방자치기본법, 지방집행기관법) 간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특히 “제주도의회의 직급을 집행부인 제주도와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사무처 2·3급 직급 신설, 기존 4급의 전문위원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로 조성하자!

국회 송재호 의원실, 제주도의회 공동주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 한경·주자)은 국회 송재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문화예술의 섬 제주, 아시아문화예술 허브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월 30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문화예술의 섬 제주를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른 지역과도 비교우위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인 제주 문화예술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함이다.

특히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공동기획 한 것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문화예술의 섬 규정을 더욱 확장시켜 향후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나 정책개발에 국회 등 중앙차원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김영호(중앙대학교 미술학

부) 교수가 “제주 문화예술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강민(제주아트) 대표가 “아시아 문화예술 허브 조성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윤석 서울옥션 전무가 좌장으로 참석하고, 김향자 서울시립대 교수, 양은희 스페이스 D 디렉터 대표, 양지연 한국예술경영학회 회장, 이대형 아트디렉터, 캐슬린 김 미국변호사가 참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 제주특별자치도 고춘화(문화체육대회협력국) 국장이 토론자로 함께 참석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진정한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섬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은 아시아의 문화예술 허브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 음악, 공연 예술을 비롯해 문화예술산업을 전반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 조성을 통해 세계 유수의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국제아트페어와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도 연중 유치 개최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문화예술관광도시로의 성장 로드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며 토론회 기획 의도를 밝혔다.

공동 주최한 송재호 국회의원 또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법 제도개선은 물론 ‘문화예술의 섬, 제주가 아시아 문화예술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국회차원에서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정책토론회

특별법 개정권고안 공감대 형성 차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동으로 10월 8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권고안이 2021년 8월 27일 접수되어, 제1안으로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적정 의원정수 확보를 위한 기준 선거구제도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정책토론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이뤄졌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자치분권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자치도로 자치분권을 선도하여 왔던 제주의 지위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토론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토론회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들과 정책소통 지속한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마련한 2021년 연속기획 청년정담회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묻다: 청년문화와 여가」가 9월 29일 제주청년센터 오픈



라운지(5층)에서 열렸다.

이번 2021년 연속기획 청년정담회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묻다」는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삶과 정책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청년당사자와의 정책토론 등의 공론 기회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도의회와 청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년이 중심이 된 다양한 의제 및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제주청년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했다.

제주청년센터는 주제선정을 위해 사전에 구글폼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제11회 주제인 "청년참여와 활동"에 이어 이번 제12회 주제는 "청년 문화와 여가"다.

이번 제12회 청년정담회는 김채운 씨의 「제주청년문화예술 허브 조성」에 대한 발제와 함께 27세~36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청년정담회를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문종태 의원은 "3회 이상의 연속기획 청년정담회를 기획했는데 이번이 두 번째 시간이며, 청년들의 현실 인식과 제안을 수렴하여 마지막 시간에는 실질적 정책반영 여부 등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청년뿐만 아니라 정책수요자 중심형 정책발굴을 위한 선도적 의견수렴 모델이 되길 희망하며, 수렴뿐만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입법 연구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와 연구모임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대표의원 고현수)은 10월 8일 제1소회의실에서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입법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최근 성별, 장애, 종교, 성적지향 등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범죄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 연구모임 주도로 혐오 표현에 관한 입법연구를 통해 혐오 표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방지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조백기 박사(前 평화인권연구소 소장)가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입법 연구'

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고현수 의원을 좌장으로 권혁일 소장(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오임수 과장(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김상훈 사무국장(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나오미센터), 양희주 사무국장(제주여민회), 이상활동가(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고현수 대표의원은 "최근 SNS 등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혐오 표현이 급증하고 있고,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사회 전체로 전파되며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고 지적하면서, "이번 연구가 지방정부 차원의 최초 혐오 표현 대응 입법방안이라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도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극심한 성별 임금 격차, 해소책 절실하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의원)와 의원 연구모임 제주성평등포럼(대표의원 김경미 의원), 그

리고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주지역 성별 임금 격차 해소방안을 위한 공동포럼'이 9월 27일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신승배 연구위원(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은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는 천차만별이다. 이 가운데 중위 임금 기준으로 제주연구원이 51.0%로 차이가 가장 컸다. 이는 남성이 월 100만 원을 받으면, 여성은 49만 원을 받고있는 것이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기관의 임금 격차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38.0%), 제주경제통상진흥원(37.5%), 제주신용보증재단(29.2%), 제주관광공사(26.3%), 제주4·3

평화재단(25.1%), 제주에너지공사(24.1%), 제주테크노파크(22.8%), 제주의료원(17.1%), 제주영상문화진흥원(16.3%), 제주개발공사(12.8%), 서귀포의료원(4.6%), 제주문화예술재단(3.4%) 순이다. 이처럼 성별 임금 차이가 극심한 것은 유감이다. 민간기업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임금 격차에 대해 남성이 직장 내 구성 비율이 높고, 상위직과 장기근속에 쏠림 때문으로 분석했다. 반면 여성은 구성 비율에서 높아도 상위직이나 장기근속 면에서 낮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아직도 여성은 '유리천장'으로 하위직에 몰려 있고,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환경도시위원회

한라산 오름 정상 레이더 시설공사 중단 촉구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 사업현장 방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가 불법 건축 허가의 의혹이 제기된 국토교통부 제주남부지역 항공 레이더 현대화 시설 구축 예정지를 찾아 공사 중지 조치를 요구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10월 15일 서귀포시 색달동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을 찾아 현장을 살펴본 뒤 “제주도 환경보전국에서 국토부 측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절대보전지역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행위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해당 조례 제6조 5호는 절대보전지역 내 오름에선 레이더와 같은 무선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아울러 6호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활용하는 행위, 즉 개발 행위에 대해 도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부 항공로 레이더는 전파법 상 무선 설비에, 삼형제큰오름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절대보전지역에 해당돼 조례 두 규정 모두 적용을 받는데도, 도는 이미 문화재청이 레이더 건설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조례 5호를 배제한 채 레이더 설치를 허용했다.

도의회는 사업 중지 요청에 대해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서귀포시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름 정상 1500㎡ 부지에 제주 남단 항공로를 감시하는 지하 1층·지상 1층의 레이더



시설을 짓고 있다. 현재 이곳은 숲이 훼손된 가운데, 공사하며 나온 돌무더기로 쌓여 있다. 국토부는 기존 안덕면 동광 레이더시설이 노후화된데다,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오름 정상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2공항 추진, 도민 갈등 해소 등 도정 역할 부재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0월 13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공항 건설사

업에 대해 제주도가 도정 공백 상황에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충룡 의원은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 주민 수용성을 모두 갖춘 제2공항 건설사업 진행이 왜 더딘 것이냐. 반대와 우려곡절이 있긴 했지만 맹공이, 숨골 없는 데가 어디 있냐. 다른 공항엔 없냐”며, “추진단의 활동 내역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고용호 의원 역시 “6년 동안 성산읍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지만 공항확충지원단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하나도 모른다.”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 해산하라.”고 쏘아붙였다.

김희현 의원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

다른 도정의 대책을 보니 ‘국토부의 요청 사항 등에 대해 적극 협조라고 나와 있었다.’며, “결국 도지사 공백으로 제주도정의 방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반면 도지사 공백 이후 현 공항 확충, 제2공항 건설, 지역 갈등 해소와 관련한 도정의 방침이 전혀 없다.”며, “구만섭 권한대행 체제 이후 대책회의도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 손을 놓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2015년 성산읍이 제2공항 예정 부지로 선정된 이후 행정 절차만 6년간 밟아오고 있다.”며 “성산읍 주민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정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설문대할망 전시관 및 제주성읍마을 현장방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10월 8일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 전시관과 제주성읍마을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의견청취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 전시관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821억원 투자에도 불구하고 전시콘텐츠 빈약, 시공의 문제점, 학예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의 문제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된 제주 성읍마을이 지난 8월 호우로 성곽 3개소가 붕괴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치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현장브

리핑을 받았다. 또한 성읍1리 마을회 지역주민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현장을 점검하며 “설문대할망전시관은 제주의 생생함과 문화의 뿌리가 되어 온 돌문화, 설문대할망신화, 민속문화가 집대성 되어 있는 공간인 만큼 세계적인 명품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제주성읍마을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만큼 성곽 붕괴 부분은 긴급히 보수 시행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 곳곳에 분포된 유·무형의 문화자원들을 행정과 민간이 협업하여 문화가치를 극대화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와 민속예술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관광활성화 위한 드론관광 서비스 활용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제9차 토론회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대표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월 1일 소회의실에서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9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오영희 대표는 인사말에서 “드론시장의 규모가 2025년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기술로도 모든 부품의 개발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제주의 경우 고층빌딩이나 밀집도가 높지 않은 점이 드론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제주 도심지역 내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장·단점을 활용한 기술력이 요구된다.”라고 하였다.

특히 “제주도만의 관광객을 위한 레저, 관광지와의 융합한 연계서비스 등의 새로운 독자 모델 개발 또한 무궁무진하다.”면서, “승마, 수영, 등산, 잠수 등

제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블루오션의 영역이라는 점도 향후 전망을 밝게 하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항공대학교 장윤석 교수가 「드론서비스 활용사례와 향후 전망」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특히, 무인기의 물류분야 적용 가능 비즈니스 모델로 수중드론을 이용한 관광상품화와 레저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한 상용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제주 드론관광 시장의 상품으로 드론경주 및 드론 불꽃쇼 등을 제안하였으며, 드론이 난개발이 아닌 제주도의 독자적인 개발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도의회-제주도, '제주형 뉴딜 2.0' 성공 위해 '맞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8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코로나19 국면 극복 및 대전환 시기 제주미래를 위한 '제주형 뉴딜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 이후 가속화된 디지털

탈 전환·탄소중립 및 양극화 대응을 위해 추진구조를 변경하고, 재정투자 규모를 확대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뉴딜을 통한 저탄소사회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그린·디지털·안전망 3대 부문 10대 핵심과제 등 총 16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뉴딜 관련 실국 주무과장, 도의회에서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준택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백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년 동안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과 공모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며 지역사회

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국가정책 방향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제주도-도의회가 협조체계를 갖춰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 및 제안 등 공동 대응하면서 도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장은 "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제주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도와 도의회는 한 팀이며, 협조를 통한 순조로운 추진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로 구성된 '제주형 뉴딜 TF'는 향후 뉴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고, 중앙부처 절충 공동 대응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에서는 소속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2일 소회의실에서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로써,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현안과 각종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400회 제2차 정례회에 있을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2022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현길호 위원장은 "의정자문위원회는 지역현장에서 민생경제와 당면 현안문제를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분들이기에 말씀하시는 한말한말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겠다."며, "필요시에는 의정자문위원회와 우리상임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함께하고 직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정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는 지난해 9월 16일 분과 위촉식에 의정자문위원장(고양순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그 밖에 6명의 의정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교육균형 발전은 교육정책의 기본"

교육균형발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대익 교육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399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명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교육균형이라는 것이 '지원의 차원'이 아니라 교육정책의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하고 있다.

조례안은 특히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 총칙에는 학생의 학습권 및 균등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감은 정책 개발과 실행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교육장은 관내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2장은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선도지구 및 집중육성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선도지구별 지역학교발전협의회, 학생 전입 확대 방안, 집중육성학교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대익 의원은 "교육균

형발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주거 편의를 제공하면서까지 지역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마을 살리기와 직결되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과 교육균형발전이 하나의 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그간 작은 학교 대상으로만 추진되었던 다양한 교육서비스 사업을 원도심학교를 포함한 집중육성학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 간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적정 규모의 교직원을 배치하고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으로 교수학습 활동 및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학교교육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의원·직원 청렴도 향상 연수 실시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10월 12일 제2소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 상임위 소속 의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이 함께하는 전문가 초빙 청렴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류재식 강사를 초청해 지방의회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주제로 국제 부패인식 지수, 제주도의회와 제주자치도의 청렴도 순위,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연수가 진행됐다.

아울러 지역구 의정활동 시 각종 고충민원 접수

및 경조사 안내 시 주의해야 하는 행동강령 위반 사례, 공직자 갑질 징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유익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연수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8명과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 9명 등 총 17명이 참석해 공직자의 청렴 연수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부공남 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제주도 공직자의 청렴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주도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생생 의정활동

조례소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청년기본조례 동시 개정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사진 왼쪽·연동 갑·더불어민주당)과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사진 오른쪽·노형 을·더불어민주당)은 청년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청년기본조례를 동시에 개정한다.

청년참여예산제도는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개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제5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와 제19조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청년참여예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청년참여예산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한다.

양영식 위원장은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이 직접적인 사업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보다 활발하게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단순히 정책의 필요성 제기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해나가는 책임있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인 이상봉 위원장은 “청년 기본 조례 제정 당시 공동발의로 참여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주관 청년정담회 또한 12회를 맞이하고 있는 등 의회가 제주청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연호 부의장



강연호 부의장(사진·표선면·국민의힘)은 도교육청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셋째에서 둘째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제주

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다자녀 학생의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개정하면서도 세 자녀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첫째 자녀부터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재원조달 방안, 교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강연호 부의장은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강화는 물론 향후 의견을 수렴하며 교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사진·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 및 쿠팡서비스 등 비대면 배달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이동노동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동노동자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다.

본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기반 비대면 소비활동이 증가하면서 택배 및 쿠팡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며, 헬멧 등 보호장구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한다면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본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성민 위원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19년에는 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및 예산분석을 통해 열악한 청소노동자의 실태를 알린 바 있으며, 고은실 의원과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권익 교육, 상담, 보호조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사진·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금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제주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사업체 지원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신용보증 제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위주로 운영

하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업 등 관광사업체 신용보증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광진흥기금 수준의 이율(現 보증서 담보 1.85%)로 보증서 담보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관광사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산업 진흥 조례안

김창식 교육의원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사진·제주시 서부·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골프산업 진흥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진흥계획 수립(안 제

5조), 사업 추진(안 제6조), 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시행규칙(안 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창식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 골프산업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도내 몇몇 골프장들은 수익창출에 급급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골프

파라다이스 명성에 안주해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산업 정책 추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중제 골프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골프스포츠의 대중화를 통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정민구 부의장



정민구 부의장(사진·삼도1·2동·더불어민주당)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계획 수립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말기암환자 및 임종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사업을 효율적 등이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지역 내 단독구구가 증가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고 있어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

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제정 이후 실행력 있는 조례가 되도록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완화의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

종로구의회-행정자치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0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 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종로구의회 방문에 따른 정책간담회는 내년도 시행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와 관련해 전국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제도 관련 정보 공유 및 상호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종로구의회 의원들에게 ‘제주특

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제도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도의 정책연구위원 제도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오늘 정책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 간의 이해가 향상되고 앞으로 지속적인 의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지방자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도의회 행정자치



위원회와 종로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한 의정 노하우 공유기회를 자주 갖자.”고 강조했다.

4·3유적지 등록문화재 복원 정책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문화누리포럼(대표 강민숙)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4·3특

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9월 28일 대회의실에서 ‘제주4·3유적지 지속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주윤정 선임연구원이 ‘근대등록문화재와 역사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제주연구원 현혜경 책임연구원이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지 기초조사 및 역사적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제주문화누리포럼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4·3유적지가 지니고 있는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를 고려할 때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특히 관음사와 주변 5만여 평의 밀림지대는 군 초소와 군 숙영지, 주민 피난처 등 4·3당시 생활상을 그대로 살필 수 있는 역사적 증거로서 그 보존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 지정 등 계승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도 “기록과 증언을 통해 밝혀진 4·3유적지만 해도 8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관련 유적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융통성있는 법적 장치와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4·3유적지와 그 주변 환경 보존을 위한 보호 및 복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죽음교육의 깊이와 넓이 주제 세미나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제주시 노형동을 선거구)은 10월 1일 대회의실에서 “죽음교육의 깊이와 넓이”를 주제로 제주경제신문(대표 강창수)과 BBS제주불교방송(사장 윤두호) 공동으로 ‘죽음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오진탁 교수가 ‘죽음교육의 깊이와 넓이’ 주제에 대해 발제했으며, 토론에는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윤용택 교수의 진행으로 제주대 의과대학 허정식 학장,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고영철 과장, 제주특별자치도

방역총괄과 황순실 과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김미영 과장, 사단법인 제주웰다잉문화연구소 현파수상 소장, BBS제주불교방송 이병철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 2월에 “죽음교육의 필요성과 시대성”을 주제로 ‘죽음교육의 시대적 요구 세미나’를 주관하였고, 제396회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 또한 7월에는 “죽음교육의 시대적 요구와 이해”를 주제로 ‘죽음교육 강연’을 추진한 바 있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통해 도민 대상 죽음교육의 실행방안을 의회와 제주도가 함께 도출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용예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주무용인 토론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월 7일 제1소회의실에서 (사)한국예총 제

주특별자치도협의회와 함께 무용예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주무용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문경운 의원은 “제주는 무용인들이 1순위로 공연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장소이나, 인프라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무용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 공간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제주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무용인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제주 무용예술, 무용공연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논의를 나누기 위하여 마련된 소중한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토론에 참석해

주신 제주무용인, 관련 전문가, 행정관계자들께서 제주 무용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무용협회 제주도 지회 최길복 회장은 무용공연 활성화를 위한 공연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제주 무용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안했으며, 주제발표에 이어 송미숙 진주교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제주도 무용예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이어 김혜림 제주도립무용단 예술감독이 제주무용발전을 위한 전문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함께합시다

신기한 제주어 10

든지하다
(형용사) 묵직하다

<예문>

나름 뉘는 해에 흐를은 일화아방이 부룽이 뒷모감지더레 멩에를 씨완 게마는, 고망 뉘른 든직한 등돌 꺾게호곡 앞이서 쉼석 잡아둥기명 “부룽 이야, 심내영 따라와 보라” 흐여놓고 동네 서너바쿠 도는 거라. 부룽이 는 뉘 찰찰 흘치명 “이거 무산고?” 흐멍도 주연이 시기는 거난 속숨헌냥 심들게 등돌 잡아둥기명 따라뉘겘주.

‘도의회 광장’에서는 2021년부터 양전형 님의 ‘제주어용례사전①’에 실린 제주말이 600여 예문 속에 쓰이는 용례를 게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나름, 나뉘: 소의네살	바쿠: 바퀴
다습, 다습: 소의다섯살	뉘: 뉘
흐를은: 하루는	찰찰: 줄줄
뒷모감지더레: 뒷목에다	흘치명: 흘리면서
씨완게마는: 씨우더니만	이거 무산고?: 이거 웬일이고?
뉘른: 뉘른	흐멍도: 하면서도
꺾게호곡: 꺾게 하고	시기는 거난: 시키는 거니까
석: 마소를 매어 물고 다니는 고삐	속숨헌냥: 조용한 채로
잡아둥기다: 잡아당기다	심들게: 힘들게
심내영: 힘내서	따라뉘겘주: 따라다녔지
따라와 보라: 따라와 보라	
멍에, 멩에냥: 밭을 가는 소의 목에 걸치는 묵직한 반원형 나무	
고망, 고냥, 구녕, 구녕, 구멍, 굵기, 굵기: 구멍	
등돌, 뉘른, 뉘른, 드름돌: 등그스럼하고 매끈한 큰돌로 짚따위를 두드릴 때 받침 등으로 쓰기도 하고 힘을 거를 때 쓰기도 하는 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월별	회수	회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계	10회	총142일 · 정례회 2회/47일 · 임시회 8회/95일	본회의 28일 상임위 55일 예결위 22일 공휴일 37일	
2월	제392회 임시회	2.22.(월) ~ 3.4.(목)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3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 원 선임 · '21년도 주요업무 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3월	제393회 임시회	3.17.(수) ~ 3.25.(목)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94회 임시회	4.20.(화) ~ 4.30.(금) (1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95회 임시회	5.28.(금) ~ 6.9.(수) (1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6.15.(화) ~ 6.30.(수) (1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97회 임시회	7.14.(수) ~ 7.21.(수)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8월 ~ 9월	제398회 임시회	8.26.(목) ~ 9.7.(화) (1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99회 임시회	10.12.(화) ~ 11.3.(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11.15.(월) ~ 12.15.(수) (3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8일 예결위 9일 공휴일 8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2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01회 임시회	12.17.(금) ~ 12.23.(목)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공휴일 2일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 8일

생활 & 법령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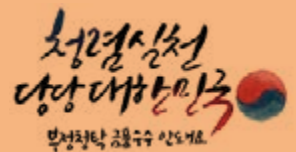
스토킹범죄, 10월부터 처벌이 강화됩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로 또는 과료에 그쳤으며,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4. 20. 제정, 2021. 10. 21. 시행)을 제정하여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시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신고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스토킹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Q&A



Q

외부강의 등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료강의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공직자들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는 제외).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려는 공직자 등은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 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 21조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원 기고

인구절벽 방책은 유아교육 혁신이다



1990년대부터 제기되어 온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2005년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유보협력 및 통합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논의만 무성하였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유보통합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유아교육의 기능이나 교육과정을 통합한 후 관리부처를 통합하고자 했지만 정권 말 추진동력이 상실되어 통합에 실패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내건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별성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요자인 영·유아들의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5년을 돌아볼 때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2018년 이석문교육감 2기 출범 후 도교육청은 제주유아교육의 기반을 다

지고 중·장기적 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 방안' 용역을 추진하였고 이 용역에는 제주시 지역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치, 유아교육체험원, 단설유치원 등 제주유아교육 발전 로드맵을 제안하였으나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시급하게 제주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첫째,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 방안과 더불어 장기적인 영·유아보육 및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운영이다. 지난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제주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추진 활동이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연간 사업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제주시 지역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및 유아교육체험원 설치이다. 연구용역 후 4년 동안 계획만 있었지 아직도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셋째, 단설유치원 설치·운영이다. 현재 4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은 노형초, 동화초, 삼성초, 삼양초, 신광

초, 아라초, 월랑초, 외도초, 제주동초, 제주중앙초, 함덕초 등 11개원이다. 학교 내 단설유치원으로의 전환은 제주유아교육 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다.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 대선 주자들께서는 영·유아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으로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과 선거공약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고대한다. 지난 8월 감사원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26년 뒤에 제주는 고령인구 대비 가입기 여성 비율이 0.5명 미만의 이른바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다. 곧이어 닥칠 인구절벽은 암울한 제주의 현실이다. 문제해결은 모든 사회 변화 유인 중심에 있는 영·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이다.

본 의원의 확고한 신념은 제주교육의 혁신과 본질이 영·유아교육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한영진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모두의 정주여건 위한 생활권 공원과 숲, 탄소중립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문화·여가 관련 2가지 국가승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비대면 여가활동과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이 코로나19로 크게 증가했다. 여가 공간으로는 식당 38.0%, 아파트 내(집주변) 공터 28.8%, 카페 25.6%, 생활권 공원 24.6%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내 공간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공터와 생활권 공원 비중이 꽤 높다는 것이다.

공원은 건강을 위해 자유롭게 거닐면서 휴식할 수 있는 장소이며, 주민들의 소통 장소이다. 정주여건을 말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원이기도 하다. 공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휴식 공간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도시 공원이 하나의 시설로 1961년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후 도시계획의 일부가 되어 도시공원이라고 명명(命名)하게 됐다.

생활권내에 있는 공터 역시 걷기와 산책을 하는 힐링 공간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실내 체육관, 학교 운동장이 폐쇄되면서 주민들이 갈 곳이 마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터는 안전을 비롯한 주민들의 정주여건으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은 있다.

산림청은 올해 초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2050년까지 매년 1억 그루의 나무를 30년간 심어 30억 그루의 나무로 탄소 3400만t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으로 자연친화적인 '숲과 나무'를 선택한 것이다. 그 중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바람 길 숲, 생활밀착형 숲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 숲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보면서 공원과 공터를 연계한 탄소중립 정책을 보게 된다.

광주는 내년까지 2년간 국비와 시비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도시였던 광주시가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하려고 해도 사방이 막혀 숲길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도시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가로수를 심고 학교에

나무를 심으며, 도시공원 내 공유지를 활용해 2022년까지 광주시 전역에 14만㎡ 규모의 도시바람 길 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제주는 248개소의 도시공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194개소는 조성완료가 돼 있고, 19개소는 조성중이다. 35개소는 미조성 공원이며 그 중 어린이공원은 11개소이다. 대선 공약을 비롯해 '탄소중립 제주'를 말하고 있는 시점에 다양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생활권 공원·숲 조성 활성화 정책은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더불어 탄소중립 제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코로나19가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라는 큰 경각심을 갖게 된 지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저탄소정책과 중심축과 더불어 각 부서의 주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김경미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기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기업은 물론 가계 역시 위협에 닥쳤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다. 이를 반영하듯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 대부분은 현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곤 한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빈곤층은 73만명으로 추정한다. 정부는 꾸준히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개개인의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

를 안내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을 개정해 2021년 9월,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시행 중이다. 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서, 개인이나 가구의 결혼·출산·육아·질병 등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제도의 도입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서비스를 문

자 혹은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외국인이라면 온라인 신청과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미 복지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안내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의 시행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술 주무관 / 제주시 삼도2동

제주도의회 부활 30년 발자취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여 '제주도의회 부활 30년 발자취'를 발간했다.

'제주도의회 부활 30년 발자취'는 320면에 걸쳐 각 대별 도의회 당시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과 사진, 도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자의 구성을 보면 좌남수 의장의 발간사를 필두로 제주도의회 연혁과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연혁은 제주도의회를 변천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구성했으며, 각 대별 원구성 현황과 역대 의장, 의정슬로건을 실었다.

좌남수 의장은 발간사에서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30년, 한 세대가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도 이제

부활 30년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함께 또 다른 도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30년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또 기록으로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각오로 50년, 100년 후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향해 힘차게 출발하고자 한다."며 책자 발간의 의의를 밝혔다.

좌 의장은 또 "이제 지방자치는 32년 만에 실시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라는 과제도 부여받았다."면서 "우리는 선배 의원님들께서 그래왔듯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제주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피력했다.

'자치입법 정책'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2021년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우수상 2건, 장려상 1건을 각각 선정하고 9월 23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는 제주지역의 현안과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3개월간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공모 결과, 모두 27건이 응모하였고, 1차 심사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2단계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실현가능성, 효율성, 창의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최우수상 없이 우수상 2건, 장려상 1건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상은 최현재(서울) 씨의 '배달·택배 이륜자동차 등의 배달상자와 배

달가방에 부착하는 야광반사체 지원 정책'과 강문상(제주) 씨의 '소외계층 등 주민자치위원의 자치학교 이수 조건 완화'를 주제로 한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장려상은 김유리(전북) 씨의 '식물 공장'으로 앞서가는 제주농업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가 뽑혔다.

이번 수상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상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이 지급됐다.

좌남수 의장은 "공모전에 참여한 제주도민을 비롯하여 도외에서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제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외 거주 수상자에게는 온라인으로 수상 및 축하 인사를 전했다.

도의회 회의록,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회의록 시스템 반응형 웹 디자인 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누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여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응형 웹은 회의록에 접속하는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를 측정하여 웹이 자동으로 그 화면에 맞는 해상도에 맞추어 화면과 내용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편 주요 사항으로는 ▷ 회의록 메인 페이지 디자인 개편과 검색 메뉴를 통합하여 검색의 편의성 제공 ▷ PC 및 모바일 접속 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회의록 시스템 구축 ▷ 영상회의록, 역사속 회의록 화면 뷰어 기능 개선 ▷ 시청 용이성과 장애인 편의 도모를 위한 영상회의록 영상 배속 기능 추가 등이며, 이를 통해 회의록 시스템 접근이 한층 쉽고 편리하게 되었다.

회의록 시스템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홈페이지(<http://www.council.jeu.kr>)에서 '회의록'으로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비대면 화상회의 개최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6건 평가



의 결과 첫 번째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6건에 대하여는 개정필요 7건, 통합필요 1건, 개정검토 14건, 이행독려 2건, 정상추진 2건으로 심의·가결되었으며, 두 번째 안건인 「입법평가 분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9월 29일 2021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ZOOM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2021년도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93건으로, 이번 제3차 평가회의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6건에 대하여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16명(총 평가위원 20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회

지표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표 적정성 등에 대하여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여 심의·보류되었다.

입법평가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은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들은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행 입법평가 분석지표의 개선안에 대하여 향후 제3기로 구성될 입법평가위원들에게 바톤을 넘기기로 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말로 마무리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 강원 원주 개최



2021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가 지난 9월 29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렸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 17개 시·도 광역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

회에서는 차기 의장단 선거 및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차기 의장협의회 의장에는 간담회를 통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